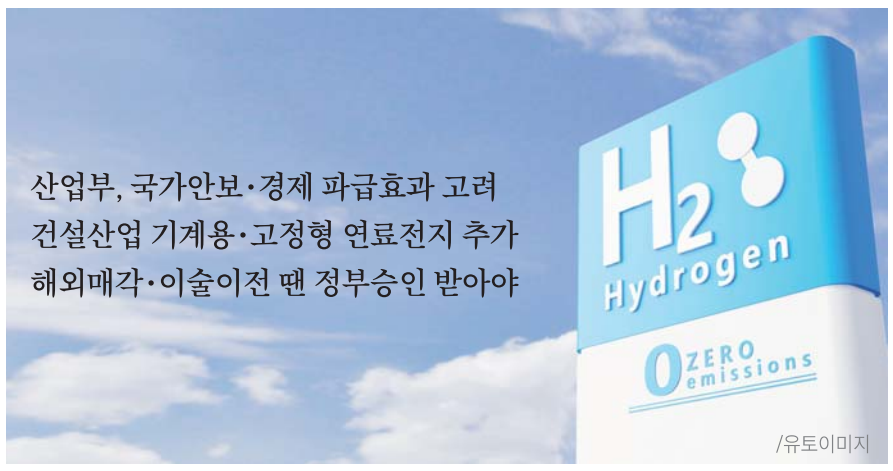
건설산업 기계용 등 수소연료전지 기술 국외유출 막는다

2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산업부, 국가안보·경제 파급효과 고려
건설산업 기계용·고정형 연료전지 추가
해외매각·이술이전 땐 정부승인 받아야

/유토이미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용 배터리 관련 2개 토종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돼 국외유출 방지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에 수소차 연료전지 이외 산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술적·경제적 가치, 기술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호필요성이 높은 수소분야 2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는 우리 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 연구동향과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자동차 분야 연료전지는 국가핵심기술로 이미 지정됐는데, 이번에 건설산업 기계용과 고정형 연료전지 두 가지 기술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되는 기술은 '1.0A/㎠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건설산업 기계용 연료전지)'과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 기술(고정형 연료전지)' 2가지다.

건설산업 기계용 연료전지는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등 건설산업 기계 등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이며, 고정형 연료전지는 움직이지 않는 기계에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이다. 기존 국가핵심기술 자동차·철도 분야에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이 지정돼 있었으나, 산업용이나 고정형 산업기계 연료전지에 관련 수소기술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분야별로 반도체 분야 기술이 11개로 가장 많다.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 설계·공정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이다.

자동차·철도 분야와 철강 분야가 각 9개, 조선 분야 8개, 정보통신·기계 각 7개, 원자력 5개, 우주·생명공학·전기전자 각 4개, 로봇 3개, 디스플레이2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매각이나 기술이전 등이 제한된다.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당 기술을 기술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누구에게 수출하는지, 외국에 나가도 되는 기술인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 뒤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성격 등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할 수 있고, 그 일몰기한이 끝났을 때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 내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공무원 줄인 자리에 군무원 증원 꼼수?

정부 공무원 감축 계획에 국방부 동참
'공무원 연금 적용' 군무원 충원키로
2027년 2000명 확대 4.7만명 계획

최근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이 발표되자 국방부도 인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는 군무원의 충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군 당국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부서에 인원 감축 검토를 지시했고, 빠르면 취합된 결과를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축소를 통해 공무원 급여와 연금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정부는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5년 동안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총 5%)를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용 자료를 통해 군무원 증원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원을 2027년까지 올해보다 2000명 많은 4만7000명으로 늘린다. 이는 통합활용정원제로 줄어드는 국방부 공무원 정원수인 약 51명보다 40배 가량 많은 인원수다. 올해 5월 기준 국방부 소속 공무원 정원은 1015명이다.

군 당국은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비전투분야에 한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무원 증원을 크게 늘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기된 문제를 국방부가 깔아 뭉개고 있는 만큼,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인사법 등을 이유로 병력과 총기 탄약의 통제를 맡는 당직근무와 위병조장 업무 등을 군무원에게 떠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무원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무원은 현재까지 국방부 본청 근무가 제한됐지만 국방부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빈자리를 군무원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며 "현역장병이 상당수 물러난 자리를 군사교육을 받아 본 적 없는 군무원들이 대신하면서 장병과 군무원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현장점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전력관리처 광역계통운영센터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전 등 녹색분류체계, 9월 발표 확정아냐… 유동성 있어"

환경부 장관 "공론화 거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이 원자력 발전(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확정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발표하겠다는 일정이 무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9월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며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에 그는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과는 달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잡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이해 관계자들, 산업계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보 처리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지금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를 통합적으로 해 최종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 관련 지적에 그는 "환경부 입장에서 국민 건강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있고, 계속 국토교통부랑 협의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해양쓰레기 주워오면 상품권 드려요"

환경부 '해치움 캠페인' 진행

오는 8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海)치움 캠페인'이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곳의 국립공원에서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캠페인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는 현장 참여로 실시된다. 현장 사무소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와 장갑을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가져오면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는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방식은 똑같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게시물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참여 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정크아트)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인 천일염을 별도 지급한다.

캠페인 관련 내용은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캠페인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